우리 모두는 노인이 된다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부국장

태어나는 이보다 죽는 이가 많은 한국은 시시각각 늙어가는 중이다. 전 세계 유례없는 고령화의 그림자는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된 죽음은 2,016건. 이 중 52.1%(1,051명)는 60세가 넘은 고령이었다.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10년 전인 2013년, 60세 이상 산재사망자 비중은 29.8%였지만 2019년 40.9%로 급증했다. 그리고 4년 만에 50%를 넘어섰다.

불안정하고 열악한 고령의 노동환경

고령 산재사망자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취업시장에서 그만큼 고령자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2013년 12.9%에서 지난해 21.9%로 9% 증가했다.
올해도 이런 현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 4월 고용률은 63%로 82년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60대 이상 취업자(292,000명)를 빼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올해 들어 고용지표는 취업자와 구직자, 실업자도 모두 60대 이상이 이끌고 있다. 정부도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고용하는 기업에게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을 올해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고령자 계속고용에 재원을 쏟고 있다.
문제는 늘어난 고령의 일자리는 대부분 불안정하고 열악하다는 점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노동환경은 더 열악해진다. 비정규직 비율만 놓고 본다면 50대 35.3%, 60대 63.4%, 70대 이상 91%로 반비례한다. 고령자 일자리확대 프로그램은 늘고 있지만, 비정규직·서비스업 및 공공행정산업을 비롯해 5인 미만 사업장·단순노무 종사자라는 특징으로 대표되는 고령자 작업환경의 안전이나 건강 문제는 찬밥 취급을 받고 있다. 산재예방의 사각지대도 커지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를 포용하는 '배리어 프리' 일터로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고령 취업자 근무환경과 산업재해 현황>[1]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재사망 만인율은 고령의 기준인 '55세'를

전후로 급격하게 변한다. 55세 미만의 경우 0.62인데 비해 55세 이상은 2.57로 4배나 높다. 특히 60대와 70대 사망만인율은 3.04, 3.46으로 전체 평균(1.12)의 3배에 육박한다.

급속도로 늙어가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숫자들은 잔인하게 다가온다. '고령친화형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없다면 산재사망자 숫자를 줄일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펴낸 노동연구원 연구진들은 "고령화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첫째 원칙은 작업요구도(부하)를 전체적으로 낮추고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장벽 없이(Barrier Free)[2] 이용하거나 모든 사람이 보편적이고 통합적으로 이용(Universal Design)하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을 산업현장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작업요구도(부하)를 낮추고 고령노동자에게도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령자 배려 의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장 내에서 연령을 고려한 위험요인 평가나 업무 배치, 작업현장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H건설은 터널 공사를 하면서 LED 조명을 이전보다 촘촘하게 설치했다.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작업자들을 위해 조도를 개선한 것이다. 표지판에도 로고라이트를 설치했다. 또 공사장 표지판 안전문구도 보다 간결하게, 글자 크기도 크게 바꾸는 시도를 했다.

배리어 프리 일터를 만드는 방법은 설계 단계부터 장벽의 발생 자체를 없애는 방식도 있지만 기존 장벽을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 당장 사업장을 둘러보자. 노인에게 안전한 일터가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다.

1) 박종식·박관성·장안석 <고령 취업자 근무환경과 산업재해 현황>, 한국노동연구원, 2024
2)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환경을 위해 물리적·제도적인 장벽을 허무는 운동